

45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민주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 4·19 혁명 60주년,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

김 동 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민주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 4·19 혁명 60주년,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

김 동 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01

## ‘기억의 사유화’의 문제점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오늘을 있게 만든 역사적 사건은 모든 후세대의 구성원이 응당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국가의 독립, 정치적 민주화, 대중의 삶을 개선시킨 소수의 선구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망각이나 공식적 공공적 기억의 결핍과 굴절,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정치사회적 인정이나 대우의 부재는 사회에 큰 주름을 남긴다. 특히 정치권력과 사회가 이들의 공로와 희생 자체를 묵살하거나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희생으로 정치 공동체가 살아남았고, 다수의 대중들이 생존을 유지하는 등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을 활용하여 국가의 영웅이 되거나, 권력과 이익까지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배제된 희생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전쟁과 같은 국가의 큰 위기 국면을 지나온 다음 최상부의 지휘관들만 영웅으로 부각되고 이름없는 병사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기여나 희생은 완전히 무시된다면, 이들 억울한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희생과 공로를 사회에 외치면서 사회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국가가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공공적 기억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거나 국가가 중요한 희생을 부인, 묵살할 경우, 희생당한 개개인들의 사적인 기억이 폭발하게 되고, 이들은 자기방식의 인정투쟁을 감행한다.

즉 공적기억에서 합당한 몫을 차지하지 못한 기억의 폭발은 사회적 대화를 차단한 채, 폭력적 발화와 행동의 양상을 지닐 수 있다. 6·70년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참전의 공로를 외치던 상이군경의 행동이 떠오른다. 6·25 한국전쟁의 성과로 집권까지 했던 박정희 군부정권은 이들 전쟁 희생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분노에 찬 거친 행동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한 전쟁 희생자 가족이나 전쟁의 상처로 장애를 안게 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당연히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성과와 기억으로 집권을 한 군사정권은 이들 이름없는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들을 제대로 돌볼 의지도 없었다. 가까이는 2000년 전후 특수임무자(북파공작원)들이 국정원 앞에서 폭발물 제조의 위협까지 가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통해 자신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대가를 요구했던 사건들이 그러하며,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이 2000년 당시 <한겨레 21>의 “베트남 참전용사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학살 보도가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겨레신문사 안팎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행동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주로 이루어진 특수임무자들의 대북첩보 활동이나 베트남 전쟁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 역시 국가가 안보의 이름하에 수많은 가난한 집안 출신 청년들을 동원하고도 이들에게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그러한 국가의 잘못에 대해 공식 인정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이런 사건들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이들도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1차대전 참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여러 보훈 조치는 1932년 보너스 아미(Bonus Army) 로 알려진 백악관 앞의 대규모 천막시위와 경찰과 군대의 폭력적 진압의 역사를 거쳐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처럼 국가가 청년들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버린 일들은 역사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특수임무자나 베트남전 참전자들을 움직이게 한 일은 민주화 이후 5·18 항쟁 희생자들과 민주화 관련자들에게 각종 보상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었다. 이들은 자신은 국가를 지킨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민주화’라는 공로가 국가를 지킨 공로를 압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목격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6·25 한국전쟁 참전자 수당을 비롯하여, 특수임무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도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 군인들이 항의 시위까지 하게 된 것은 민주화 덕분에 가능했고, 각종의 보상조치는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군부세력이 아니라 이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공격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미국에서도 개혁적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전군인들에게 보상과 일자리를 제공한 것과 유사하다. 고엽제 전우회는 2007년 국가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라 보훈단체로 승격됐다. 이들은 등급에 따라 매달 보상금을 지원받고 의료·교육·취업 등에서 지원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을까?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는 3만여명이라고 하지만, 당시 휴전선 일대에 박정희 정부는 고엽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기 때문에 실제 고엽제 피해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sup>1)</sup>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실시된 이후 이들 단체는 이제 대표적인 우익 행동조직이 되었다. 우리는 광화문 등 서울 시내 거리에서 고엽제 전우회의 봉고차량과 확성기를 통해 시위 목소리를 흔히 들을 수 있다. 고엽제 전우회는 세월호 특조위 해체 요구 집회에도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집회 요청을 했고, 자금은 전경련에서 지급했다고 한다. 그들은 왜 이러한 관제 시위에

1) 현재 한국의 고엽제 환자 138,948명이며 그 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53,809명, 후유의증 환자는 84,987명, 2세 환자는 152명이다.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매월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혜택을 받고 있다(<http://www.kaova.or.kr/document/AO/AO06.php>).

---

동원되었는가? 그들을 그렇게 전쟁의 희생자로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에게 오히려 이 점을 정식 제기하고 항의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극우 행동대로 동원되고 있는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sup>2)</sup>

2019년 고엽제 전우회 관련 큰 비리사건이 터졌다. 1997년 전우회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사실상 종신집권 형태로 전우회를 이끌던 핵심 간부들이 주택사업 건으로 33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간부들이 공금을 착복하는 동안 ‘단체의 회원들은’ ‘돈과 주먹’을 가진 간부들의 데모 동원 요구에 복종하면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왔다”고 분노를 터트렸다.<sup>3)</sup> 이것은 아마도 보훈사업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존재로 인정받은 여러 보훈단체나 그 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이 국가의 지원 사업에서 나온 예산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빼돌린 일이 여러번 드러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단체의 회원들이 관제 시위 동원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들 모두가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닐 것이다. 단지 역사적 사건과 중요한 역사적 기억이 공공적으로 인정되거나 후세대에게 공유되지 않고, 당사자의 억울함에 기초한 폭력적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인 보상위주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희생자 조직은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망 위의 특권적 조직으로 자리잡고, 소수의 간부들이 비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적 지식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개인화될 경우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국가가 청년들을 죽음의 지경까지 몰고 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본인과 부모,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국가는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건의 모든 진실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수만명의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도 바로 그런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박정희 정권 시절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북파공작원 북파사업에 대한 군사정부의 정책과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었는가? 베트남 고엽제 살포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제공받았는가? 그리고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국의 국가는 참전군인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진실을 밝혔는가? 과연 국민들이 이들의 희생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가고, 그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온갖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인정’을 요구하는 여러 개의 ‘유공자’, ‘유족회’, ‘희생자’ 집단이 난립하게 된다. 각 단체는 자신이 진정한 공로자 혹은 희생자라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

2) “나는 고엽제 피해자... 이렇게 뿔출 몰랐다”, <오마이뉴스>, 2011.5.23

3) “다 나랏돈이고 10만 회원 돈인데, 그들 뺏속으로 들어갔다”, <한겨레신문>, 2019.3.23

---

반목하고,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나 일반화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그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역이자 당사자라 생각하고 그것을 정치권과 사회에 요구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엽제 피해나 북파공작원 조직들 내부의 갈등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으나 감히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건드릴 수 없는 위세를 갖게 된다. 기억의 사유화 현상이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희생과 헌신이 민원해결 요구 방식으로 제기되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여 이들의 비뚤어진 인정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보상 위주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러한 일그러진 일들이 발생한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다른 사회구성원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는 이들 희생자들의 항의시위, 심지어는 폭력 행사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한다. 그래서 공적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의 복원이나 공적 기억의 정립은 오직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관련 유족, 여러 개의 희생자 모임 등이 난립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매일 이들의 항의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자신의 고통과 희생이 부당하게 부인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항의와 요구, 특히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듣거나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의 비뚤어진 인정투쟁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의 사유화, 당사자들의 기억 특권화는 이들을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 02

## 민주화 운동의 기억, 피해와 공로의 인정 문제

전쟁, 국가폭력, 재난사고 등으로 보통 사람들이 희생된 경우, 희생자들 대다수는 자신이 왜 희생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알기 위한 기회나 학습의 경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는 저학력, 저소득층 출신들인 이들 보통의 희생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에게 호소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쟁, 폭력, 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들은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 당한 경우가 많았지만, 각종 특별법 등에 의해 사건의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만 받고 침묵하도록 강요당하는 등, 또 한번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그렇다면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대의를 지지하여 행동하다가 희생된 경우는 어떠한가?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희생과 큰 대의를 가진 조직활동, 민주화 관련 시위나 항쟁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것, 혹은 대의의 실현에 큰 공로를 세운 것과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후자는 역사적 항거나 운동의 대의에 공감하거나 지지하여 적극적 의지와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권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예상되었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거나 주도한 사람으로서는 사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공훈은 자신의 행동의 대의를 값싸게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폄하하는 처사라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보훈처에 자신의 공적을 등록하거나 유공자로 신청하기를 거부하였다.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가 행세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신이 보상을 바라고 그런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인정을 받는 행위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훼손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마땅히 이들의 희생과 공적을 기억해야 하고, 관련자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막상 당사자는 그것이 적절한 사회적 역사적 인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더구나 자신의 공적을 인정한다는 정부나 국가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자신이 경멸하는 집단이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에게 보상을 해 준다면 그것을 덤석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역시 마찬가지다. 독재정권 하에서 항의하거나 투쟁한 것은 이후의 보상을 예상한 행동이 아니었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저항 행동은 자신의

---

인생을 건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이후의 모든 기득권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 이후 자신의 일을 기억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계산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더구나 큰 탄압에 예상되는 위기 상태에서의 저항 행동은 앞뒤를 가리는 깊은 고려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에 따른 처벌은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손실로 작용했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지금도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게 사회적 인정과 보상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국가의 공식 기념일 지정, 각종 기념행사, 명예회복과 훈장 수여, 그리고 경제적 보상액을 좀 더 늘리면 부정의가 교정되는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들 사건과 그 피해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 사건들이 공적 기억으로 확고하게 정립되는 일일 것이다. 조직적인 저항운동,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원래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합적인 행동,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참가자 개인별로 공적을 심사하는 일은 그러한 행동의 대의나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개인별 공적을 심사하게 된다. 앞에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의해 기억의 사유화가 발생한 것처럼 국가가 기억, 희생, 공적을 독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사정권 하에서는 숨기고 싶은 경력이 이제 세상이 변하자 자랑할만한 경력과 기억이 되고, 그것에 대해 여러 사회적 인정조치와 훈·포상 조치가 따라오게 되었다면,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일부, 특히 자신이 직접 그 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자식세대 사람들이 부모의 공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국가폭력이나 국가 잘못의 일방적 희생자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애초에 항일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의 대의만을 생각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 생각하여 다행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보상을 둘러싼 이해의 다툼,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인정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인정과 보상을 해달라고 주체로 등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보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애초에 자신이 그것과 연루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불의한 정권에 편승하거나 복종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희생자, 공로자로 돌변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탄압을 무릅쓰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과거 행동의 대의를 강조하면서 앞장서서 기억 투쟁, 인정투쟁을 했던 사람들 대신에 대의를 따라 행동한 당사자와는 달리 오직 일방적으로 희생만 감수했다고 생각하는 자녀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억울함'에 기초한 인정투쟁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열거한 폭력의 희생자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사람들, 즉 이념과 확신에 기초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애초부터 공적인 것으로 보고, 국가의 보상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인혁당 조작 사건 희생자들이 보상금을 출연하여 4·9 평화재단을 만들고, 고문 등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치유사업에 앞장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항운동과 관련된 희생의



---

경우에도 국가가 훈·포상 대상자를 선별하고, 보상조치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사건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도하는 각종 모임에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소지는 매우 크다. 즉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일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경력이자 상징으로 공인되고 그 상징이 보상을 수반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전체적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일보다는 자기 개인의 공적에 집착할 여지가 점점 커진다. 부모의 뜻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나 구성원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과 경계는 매우 애매하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 공권력의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정치에 대해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순간적 정의감과 우발적인 분노로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단순한 권익 실현을 위한 항의가 점점 확대되어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6·25 전후 ‘배가 고파서’ 군에 입대한 사람이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이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듯이, 시위 현장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경찰의 발포로 희생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희생을 절대로 폄하할 수 없고, 개인별로 공로의 과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희생을 인정하는 것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희생은 희생대로 국가나 사회가 인정과 배·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공적 인정은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실행해야 한다. 전자는 공권력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면, 후자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비전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 희생자 모두를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4·19 혁명이나 5·18 항쟁 당시의 준전쟁상황에서 정권과 폭력에 맞선 저항 행동의 상당 부분은 그 이전의 조직적 활동, 그리고 일관된 의지와 숙고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기치 않은 희생을 초래한 경우도 많다. 냉정하게 보면 이 혼돈기의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고, 일관되게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유공자의 경우에는 명예를 살리고 그들의 기여와 기억들을 사회적으로 공식화하여 후세대에 교육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인정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이후의 활동에서 일관성이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청년시절 한때의 분노나 정의감으로 반독재 저항행동에 나섰으나, 이후 자신이 저항했던 권력에 계속 봉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에게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4·19 혁명 공적 심사에 참가하고 이런 혼란된 느낌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4·19 혁명 유공자 추가 선정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한 것 같고, 그래서 수천 건의 유공자 신청 요구서가 쇄도하였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는 여야 거물정치인을 포함하여 기업, 언론계에서 나름대로 크게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4·19 혁명 당시 학생이었던 사람들 수십만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므로 따지자면 모든 시위 참가자가 유공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시위에서의 주동자 역할을 ‘민주화 유공자’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까? 아마 이 중에는 애초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사실 4·19 데모 당시 자기보다 더 중요한

---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신문에 거론되었거나, 사진에 나왔다거나 하는 우연한 이유로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신청자들의 판단이 사실에 더 부합할 수도 있다. 지하에서 항일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아무리 헌신적으로 했어도, 경찰의 추적과 투옥을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4·19 혁명 당시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졌던 의문은 오랜 군사정권 시기에 정권에 협력하여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공적 신청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과연 민주화 유공자로서 자손 대대로 명예가 남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또한 4·19 데모 당일에는 반이승만 시위 데모대에 참가했지만, 박정희 정권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에 협력했을뿐더러 지금도 민주화나 민주주의와는 거의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신청했는데, 이들까지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는다면 그 보다 몇 배 엄혹했던 유신시절에 지하에서 데모를 모의하거나 제적 투옥을 각오했다가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몇몇 친구들과 선후배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도 가졌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상처와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피해를 복원시켜주는 것이 맞지만, 희생이 컸다고 해서 공로가 큰 것은 아니었고, 반대로 사회운동에서 역할은 컸으나 피해는 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분명히 공동의 행동이었던 민주화 운동이 사후에 국가가 개인별 기여정도를 심사하여 공적을 차등화할 경우 사건의 역사적 의미나 공적 기억은 부차화되어 버리고, 개인별 훈·포상만 부각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여 그것을 공공의 기억으로 확립하는 작업을 선행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상의 의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의 피해나 사건이 가진 비중을 견주어 일부 지도자들의 공로가 공적으로 인정되거나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폭력의 희생만큼이나 그 대의가 굴절되고, 외부 사람들이나 후세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크다.

## 03

##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공화, 사유화

올해는 4·19 혁명 6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고, 5·18 항쟁 40주년을 맞는 해다. 그래서 이런 기억과 기념을 둘러싼 여러 행사가 개최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4·19 혁명의 기여가 큰지, 5·18 항쟁의 기여가 큰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5·18 항쟁 당시의 투쟁과 희생은 길이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변동의 역사에서 보자면 4·19 혁명은 5·18 항쟁에 비해 과소평가되었고 역사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뿐더러 6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5·18 항쟁도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기는 하나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4·19 혁명은 '5·18 항쟁'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1980년 이후 5·18 항쟁의 경우 호남과 민주당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체가 그 기억과 기념의 중요한 동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4·19 혁명은 그러한 지역단위 정치적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4·19 혁명 시기 186명 희생자나 4,000여명의 부상자, 그리고 당시 데모에 참가했던 수십만명의 학생, 청년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주체가 없다고 말하는가? 사실 4·19 혁명의 주체는 1960년 대구 2·28 이후 시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며, 그들과 같은 심정이었던 국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구체적 지역적 정치적 주체의 부재는 바로 4·19 혁명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4·19 혁명이 5·18 항쟁에 밀린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시위를 이끈 일부 대학생 지도부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그 시점의 반독재 민주주의 정신을 거의 버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4·19 전후 시위에 참가했다가, 4·26 이승만 하야 직후 통일운동이나 사회운동에 가담했던 학생 청년들은 노년이 된 지금까지도 운동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즉 4·19 혁명 당시 세간에 알려진 스타급 대학생들 중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와 맞선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들 중 일부는 5·16 군사 쿠데타나 이후 개발독재체제가 4·19 혁명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당시 시위군중들에게 발포한 경찰, 투표를 조작했던 자유당 정치가들과 관료조직 등 이승만 정권 말기에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들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변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즉 4·19 혁명이 5·18 항쟁에 비해 턱없이 과소평가되고, 사료관이나 기념관 하나 없고, 국민들의 공식적인 기억에도 멀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4·19 혁명을 소수의 스타급 인물들이 군사정권에 협력하여 사유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경찰 발포로 희생된 이름없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나 부상자,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알려질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까지 언급된 4·19 혁명의 정신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다시 부각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을 정치사회적으로 강조할 주체 세력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5·18 항쟁이나 다른 민주화 운동 가담자들에 비해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구의 2·28, 대전의 3·8, 마산의 3·15, 서울 고려대의 4·18 시위 등을 별도로 기억, 기념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독자적인 기억, 기념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마산 3·15, 대구 2·28, 대전 3·8 의거는 모두 각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결국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운동의 한 울타리에 속해야 할 이러한 운동 참가자들이 이제 각각 ‘최초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부여를 하면서 각자의 기념, 기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19 혁명이 전국단위의 역사, 공공의 기억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지역사회의 시위, 그리고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인정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이런 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다는 큰 역사적 대의 속에서만 빛이 나는데, ‘우리 지역’의 ‘내가 참가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분열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억, 기념사업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4·19 혁명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는 더 멀어질 것이다.

4·19 혁명 희생자유족회가 보훈처가 관리하는 준관변단체로 전락한 사실들이 바로 기억의 변질과 후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3·15의거기념사업회의 회장 선출을 둘러싼 총돌 사태,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운동인 3·15 항거를 기념하는 모임이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내부의 비판이 제기된 것도 역사적 사건의 지역화, 사유화의 결과일 것이다.<sup>4)</sup>

마산의 3.15와 대구의 2·28, 대전의 3·8이 모두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어 이제 기억, 기념행사에 국가의 예산이 지출되고, 일부 관련자들도 유공자로서 인정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두 사건을 역사적 사회적 기억으로 자리 잡게 할지는 의문이다. 올해 대구의 2·28, 대전의 3·8, 마산의 3·15, 서울의 4·18은 아마 별도의 기념행사를 하게 된 것 같고 4·19 혁명 기념행사가 어떻게 공동으로 준비되는지 듣지 못했다.

과연 오늘 누가 2·28, 3·8, 3·15, 4·18을 각각 기억할 것인가? 각 지역사회의 일부 역사교사가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지역의 기념 장소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사건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당사자들만의 기억이 아닌 사회적 기억으로 승화되고 오늘을

4) “3·15기념사업회 회장 선출이 가장 비민주적?”, 〈오마이뉴스〉, 2016.2.18

사는 학생,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는 기념행사, 기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5·18 항쟁은 어떠할까? 광주에서는 도청 현장보존 문제를 둘러싸고 5·18 민주유공자회와 지역 시민사회 사이에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5·18 항쟁 희생자들은 도청의 현장보존만이 5·18 항쟁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 주장하지만, 대다수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sup>5)</sup>

이들 5·18 항쟁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감히 반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업은 계속 파행을 겪어 왔다. 5·18 항쟁은 광주와 호남이라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주체가 있으니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기념행사, 각종 공연, 문화행사 등이 예년보다 더 크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사로 인해 국민들이 정말로 5·18 항쟁의 기억을 더 강하게 새기게 될까? 그런데 광주가 아닌 한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의 참여하에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구나 부산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이 광주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민주화의 공로에 공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 5·18 항쟁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가져온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기억과 기념사업이 점차 국가의 공식의례 혹은 당사자들 주도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은 현재의 민주주의의 과제와의 접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4·19 혁명은 공공의 기억으로 부활하여 오늘 한국이 처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역사적 되새김질의 자료가 아니라 참여한 개개인이 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한 그들만의 기억, 정부의 보훈 사업의 일환으로 변해 가고 있다

만약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모임이 과거의 상이군경회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지금의 청년들이나 일반대중들은 이 사건들에 대해 더욱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아마 학생들은 역사교사들의 관련 수업이나 기념행사 동원에도 짜증을 낼 것이다. 과거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주지 못하고, 기득권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부쩍 심해진 5·18 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자체는 반인륜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기억의 개인화, 사유화, 진상규명과 공공기억 없는 보상조치는 이러한 틈을 만들어내고, 국가폭력의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공공의 기억, 살아있는 기억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사건의 기억 작업이 역사적 평가를 위한 공론의 활성화와 지적인 탐구를 결여한 채, 오직 참가자 개인들에게 훈장을 주는 일로만 머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가의 억압과 폭력도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장의 폭력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의 피해들도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후세대 시민에게 교육해야 여전히 살아있는 과거가 될 것이다.<sup>6)</sup>

5) 박경섭, "기억작업(memory work)으로서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 조성의 의미와 과제 :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s://ikd.kdemo.or.kr/board01/view.asp?key=49&main=&sub=>

6) 이재승(2010), 『국가범죄』 엘피, 578-580쪽

## 04

## 맺음말

사건 희생자, 피해자들의 인정투쟁, 기억환기 투쟁은 어떤 시점까지는 분명히 정당한 것이었고, 국가나 사회의 응답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건들이 공공의 것이 아니라 참가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이나, 큰 역할을 한 몇몇 개인 혹은 특정 지역의 것으로 사유화된다면 역사적 기억은 굴절되고, 인정투쟁은 변질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자체는 공공의 것이고, 보상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의 굴절, 인정투쟁의 왜곡은 주로 정부의 일관되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 과거사 관련 정책, 정치가들의 지역의 표 의식, 역사 해석 작업에서의 공공성의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한다. 그래서 특정 희생은 특권화되고 다른 희생은 폄하되거나 부인될 경우, 소외된 희생자들은 굴절된 인정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사건의 현재화 작업보다는 과거의 시간대에 사건을 고정시키게 되거나 사건을 조직 당사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소유해야 할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공공적 기억의 실종 상태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참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의 것이며, 오늘을 사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4·19 혁명과 5·18 항쟁, 그리고 모든 민주화 운동이 공공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오늘 한국에서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민주주의의 질적인 심화를 위한 역사적 소재로서 부단히 현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올해는 4·19 혁명과 5·18 항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고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기억은 온 국민의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되고, 그 정신이 살아 움직일 것이다.

# 민주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 4·19 혁명 60주년,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